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모색*

- 안전도시 설계 영역에 대한 AHP분석을 중심으로-

김학실**, 이주호***

본 연구는 그동안 여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가치를 보유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도시설계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도시조성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 내 여성의 생활안전에 대한 전문가 조사(AHP) 결과, 주거환경 내에서의 치안활동 강화 및 안전예방시설 강화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이용시설 치안활동 강화, 근린생활공간의 치안활동 강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도시 안전성에 있어서 여성성을 고려한 안전도시의 방향은 물리적, 시설적 측면의 안전 강화나 안전교육 강화라는 제도적 보완보다도 실제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치안활동 및 감시 강화 측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사회서비스로서 안전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기업, 여성생활안전, 안전도시, AHP분석, 치안활동

1.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는 1970년 이후 산업화, 도시화로 빠른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의 기능은 확대되고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구과밀의 문제, 산업의 집중, 교육 문화시설의 집적이 발생하였다. 지난 산업화기간동안 도시는 성장 혹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양과 산업 공간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온 것이다. 이는 도시가 인간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치안상황은 경기침체로 민생 침해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쇄살인사건, 안양 초등생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9-413-B00031).

** 제1저자, *** 교신저자.

유괴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진석, 2011: 42). 더욱이 서울과 같은 경우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안전사고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단독주택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신상영, 2012: 1). 이에 따라 도시 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 욕구 증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UN이 주창해 온 바와 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성, 쾌적성, 및 인간성을 비롯한 소위 3Y가 전제되어야 하며 안전성은 쾌적성과 인간성 담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된다(이만형, 2007: 2).

이에 따라 안전도시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활동의 강화(장석현, 2005; 2006; 김보환, 2003; 양문승, 2002)나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최응렬, 1994; 김세용, 2008; 표창원, 2003; 김영제, 2007; 김동근 외, 2007; 박현호, 2007; 이은혜 외, 2008)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시민참여, 시큐리티산업의 발전, 지역자율방재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할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내재적 한계를 실감하면서 서비스 제공 수단의 대체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그 핵심가치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는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도시공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가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현대 도시의 범죄나 사고 등 안전소홀, 시설의 접근과 기능에서 안전성 부족, 안전서비스에 대한 질적 제고 등은 여성과 남성의 젠더적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일-가정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도시설계는 지역의 핵심 전략과제의 하나로서 보다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²⁾는 도시와 공간을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 이용주체로서의 여성이 생활공간이자 근무공간인 도시 내에서 당당하게 편의와 안전을 주장하고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가치를 보유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도시설계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도시조성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 1) 도시 내 안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2) 젠더적 관점에서 도시연구 필요성은 김영화(2010: 96-98)를 참조.

1.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조성의 필요성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슈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이상문·전영옥, 2009: 217). 도시에 있어 여성친화적 요소를 고려한 시기를 거슬러 가면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요구하였다. 이후 1981년 캐나다의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이후 몬트리올 등에서 버스정류장과 집 사이의 안전교통 제공, 대중교통의 여성친화적 개선, 독신여성과 모자가정을 위한 주택건설 등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는 공공공간에서 여성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전된 후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Huber, 2007), 1992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의제로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정주권 확보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며, 1994년 이후에는 인간중심의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위한 원칙과 다양한 대책 모색의 과정에서 여성성의 고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6년 이후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전략에 대한 요구가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활발히 추진되었다(충북여성발전센터, 2010).

과거 도시발달 과정은 성별관련성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여성과 공간과의 관계 요인은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보다 큰 화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인으로서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은 도시건설이나 계획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여성의 위험요소 내지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은 여성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실시하여, 이를 정부의 실천과제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환경 속에서 여성의 포괄적 안전증진은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과 이웃으로부터 넓게는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로부터 폭력과 범죄에 더 많이 노출 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포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연계되어진다.

기존의 남성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생활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생활환경을 논하고 있다. 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이미 유럽에서는 1997년 암스테르담 협약이후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2004년 연방건설법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성 인지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및 설계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표 1> 독일의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과 안전

계획과제	계획배경	계획방향	계획전략
사회적 이동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자가용 소유비중 미비 ·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대중교통을 이용한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접근체계 완비 · 주거지, 정류장 반경 1km이내 보육시설 설치 · 주거지에서 자전거 이용거리 권역 내 학교 설치 · 놀이터 위치 선정(안전한 접근, 보행자전용도로 인접성)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지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거주 및 사회통합가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다양한 용도 허용 · 1층에 활기 띤 용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공간의 이용가능성 확장 · 건축물 배치가 안전성 결정의 핵심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이용을 보장한 건물위치와 방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건물 위주 설비 · 공공교통공간과 평행배치 · 1층의 위험인식 공간제거 · 도로 끝에 활기찬 용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공간은 위험공간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공간 이용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분산 및 개방형 주차설비 도입 · 지하주차장 최대 지하1층 · 혼합이용이 가능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계층과 시간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원시설 접근체계 설비 · 야간 이동경로 제공 및 직접 연결망 설치 · 빈번한 이용 시설 설치
정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공간으로 인한 주거지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간의 기능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최소 2m-4m 확보 · 쇼핑시설과 인프라 확장 · 주거혼합지역 내 차폭 감소

※ 자료: 양광식(2009: 33) 수정 인용.

특히 도시 공간 내 여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가정 밖의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하게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여성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델로써 여성과 공간의 관계성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전략에서 매우 의미 있는 요구가 된다.

더욱이 최근 도시 치안에 대한 문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민생 치안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09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20,209건(10만 명당 4,144건 발생)으로 이 중 특별법범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형법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경찰청, 2010: 107)으로 연쇄살인사건, 영유아 유괴살해사건, 부녀자 납치·강간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여성의 범죄 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도시사회 전반에 걸쳐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장기적 종합대책에 요구되며, 특히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있어 도시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 안전서비스와 사회적 기업의 의의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달체계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전략으로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King Baudouin Foundation 보고서(1994)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사회적 기업은 “실업에 처한 사회 집단의 노동 복귀를 위해 시장적, 비시장적 자원들을 구비시키는 기업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시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시장적 요소뿐 아니라 비시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리추구라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OECD(1999: 8)는 사회적 기업은 “경영전략으로 조직된 공익지향적인 비특정민간활동으로서, 이익극대화가 아닌 특정 경제, 사회적 목표 실현이며, 이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활동”을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SE: Social Enterprise)에 대한 EU의 공식적인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다수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고 할 수 있다(조영복 외, 2008: 63-65).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만(김경휘 외, 2006: 33; 김신양, 2008: 209; OECD, 1999: 9),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즉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기업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전달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는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집합소비(collective consumption)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협의의 사회적 돌봄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해결이 아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능동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장원봉, 2010: 42). 그러나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보다 광범위하며, 사회적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한다. 즉 Beveridge Report(중앙일보, 2007.06.26)에서 논의하는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제공 등의 다양한 내용은 물론 안전서비스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최근의 고령화, 양극화, 삶의 질이 문제는 물론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라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더욱 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3. 최근 안전도시 조성 및 치안서비스 제공의 한계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accident)와 손상(injury)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비롯되었다. 현대생활은 전기, 가스, 교통, 산업 등 일상적인 생활이 매우 복잡하여 수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우연이나 의도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인위적인 재난 즉 안전사고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은 물론 의료행위, 생산력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손실비용은 매년 5천억 달러에 이른다(<http://www.who.int> 참조).

특히 도시 공간의 안전확보 방안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다. CPTED는 도시설계 과정에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논의로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Approach)³⁾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다. CPTED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따른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3가지 기본원리에 명료성 강화, 복합대지의 활용 및 이용의 활성화, 유지 및 관리까지 발전된 6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세용, 2008: 28-30).

우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화로 인위적 순찰이나 조사를 통한 감시보다 일상에서 외부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범죄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둘째,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 지역에 대한 접근자를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정해진 공간으로만 통행하도록 설계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정도를 높여 접근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범죄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영역성에서 영역이란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담장 설치 등과 같은 경계의 구분으로 침입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범죄를 감소시키는 원리이다.

넷째, 명료성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도시설계로 가시성 높고 이해하기 쉬운 사인체계와 명확한 형태의 단지 조성으로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활용성 증대란 자연적 감시와 같은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장소에 가급적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으며, 발각에 대한 위험과 범죄 실행의 어려움을 높여 기회를 줄이고 범죄의 이익을 감소시켜 이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임(김세용, 2008: 28).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활발한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를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관리는 앞선 5가지의 CPTED 원리를 적용하되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유발하도록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도시공간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CPTED 계획은 범죄와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수단, 사회적 제도, 경찰 활동, 도시경영기법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출입통제, 감시, 감시활동 지원, 동기강화를 통해 안전 공간을 구현하고, 영역방어, 개인방어, 단속강화, 신뢰회복 등의 4가지 전략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다(조병인, 2008: 21). 즉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도시의 낙서, 폐쇄 건물의 출입통제 등으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른 바 ‘깨진 창 이론’의 적용이나 도시개발과정에서 슬럼지구의 재개발, 경찰의 엄정한 순찰근무 활동의 강화, 도시설계 및 건물설계 과정에서 안전 및 범죄 예방 설계지치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PTED 계획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감시시스템의 강화나 경계의 명확화로 내부인과 구별되는 외부인의 확인, 통제 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역할이 여전히 도시 내 여성 안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방어인구는 5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치안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시큐리티 산업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박기범, 2008: 110) 그 소비의 대상이 기업 또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구 단위에서의 수요 창출은 물론 이용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를 포함한 시큐리티 산업의 서비스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으로 이루어져 치안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아직은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 내 여성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의 강구가 요구되며,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방법의 다변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III. 도시 공간 내 여성안전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 평가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 있어 AHP 분석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우선 측정하여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AHP 분석에서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 영역을 환경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생활공

간으로서 시설적 측면에서 공공이용시설, 생활공간으로서 주거 및 주거지역 환경, 그리고 근린생활공간으로서 공원, 녹지, 도로 및 보행도로로 우선 구분하였다.

<표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측정목표와 측정영역

도시 내 여성생활안전 정책 방향	도시 내 여성의 이용 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 정책영역으로서 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공원, 편의시설 시설 등)을 포함한 공간을 대상으로 함
도시 내 여성생활안전 정책 영역	공공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여성 생활안전 정책
	주거환경 : 정주공간으로서 가정, 아파트 주거의 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한 여성 생활안전 정책
	근린생활공간 : 생활권 내 공원, 녹지, 기타 휴양 및 놀이시설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한 여성 생활안전 정책

한편, 안전도시 설계를 위한 측정영역을 구성하는 측정요소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측정영역별 측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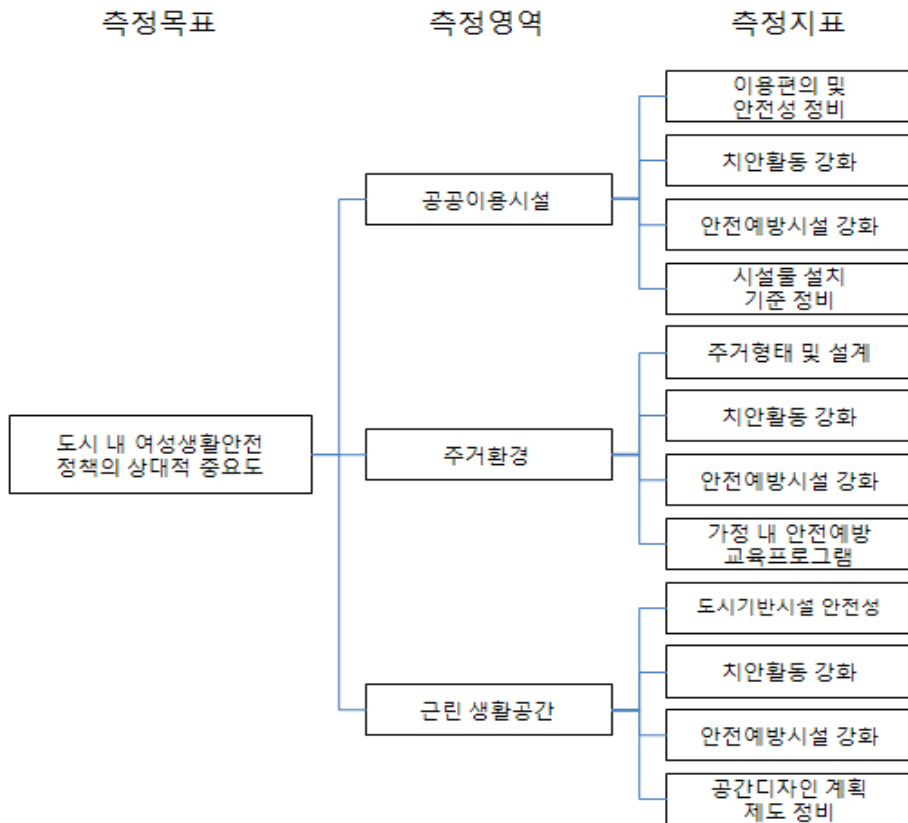
측정영역	측정요소	내용
공공이용시설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정비	보행, 시야 등 공공이용시설 내 이용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여성의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
	치안활동 강화	사각지대, 여성 이용 공간에 대한 공공이용시설 내 방법, 순찰 등 치안 인력의 배치, 활동 강화
	안전예방시설 강화	방범용 CCTV, 출입통로의 보안장치 시설 강화
	시설물 설치 기준 정비	시설물 설비, 설치 기준 등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주거환경	주거형태 및 설계	주거형태 및 주거설계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이용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여성의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
	치안활동강화	주차장, 아파트 내외 골목 등의 사각지대 등 여성 이용공간에 대한 방법, 순찰 등 치안 인력의 배치, 활동 강화
	안전예방시설 강화	엘리베이터, 주차장, 아파트내외 골목 등에 방범용 CCTV, 출입통로의 보안장치 시설 강화
	가정 내 안전예방 교육프로그램	주거 공간에서의 여아 및 성인여성의 자기보호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도적 정비
근린생활공간	도시기반시설 안전성	횡단보도, 대중교통, 도로 등 이용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여성의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
	치안활동강화	공원, 녹지, 생활권 거리 등에서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법, 순찰 등 치안 인력의 배치, 활동 강화
	안전예방시설 강화	공원, 녹지 공간 등에 방범용 CCTV, 출입통로의 보안장치 시설 강화
	공간디자인 계획 제도 정비	도시 공간계획 과정에서 공적공간 및 사각지대에 도시 공간디자인 계획과정의 여성 생활안전 고려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상대적 중요성 및 우선순위 분석은 상대적 중요도 측정영역 및 측정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수용하였으며 AHP 기법을 이용한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 요소 및 모형에 관한 논의는 3계층, 즉 측정목표->측정영역->측정치표의 구조로 구성하였다. AHP 분석은 계층제적 구조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있어 각 영역별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요소를 체계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였다⁴⁾.

이를 종합한 측정모형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상대적 중요도 측정모형의 구조

2. 분석방법 및 표본의 구성

1) 연구방법

4) AHP 분석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사고 과정의 원리, 즉 계층적 구조설정-상대적 중요도 설정- 논리적 일관성 원리가 지켜진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의 하나(홍이슬, 2010: 5)라는 점에서 계층화 구조설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 즉 분석적 계층화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잡한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기법 중의 하나로,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qualitative),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홍이슬, 2010: 3). AHP기법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비구조화 된 문제들을 하위구성요소들로 분해하고, 각 계층내의 구성요소들을 이원비교 방식(pairwise comparison method)에 의해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weights)를 할당하며,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토한 후 전체 요소들에 대한 복합가중치(composite weights)를 계산하는 기법이다(Saaty, 1982: 5). 또한 AHP기법은 양적인 측정이나 평가가 곤란한 질적 평가의 방법이므로, 질적인 판단(qualitative judgement)이 필수적인 효과성 평가(O'Neill, 1998: 746)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류상일, 2007: 121).

Saaty(1980)가 체계화한 AHP 기법모형 개발은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상영·하대용, 2006: 305; 양기근·이은애, 2010: 67-68). 1단계는 계층분석법(AHP) 모형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속성별로 계층화하여 분해(decomposition)하는 과정으로 한 계층내의 속성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2단계는 각 계층에 있는 한 속성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간의 쌍대 비교를 행하여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계층분석법의 수량화를 위한 척도는 9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⁵⁾. 3단계는 쌍대 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행렬을 이용하여 각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가중치의 추정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aaty(1980)가 제안한 고유벡터(eigen vecto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4단계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에 대한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종합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문제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W_i = \sum(w_j)(u_{ij})$$

여기서, W_i : I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

w_j : 평가기준 j의 상대적 가중치

u_{ij} : 평가기준 j에 대한 I번째 대안의 가중치

각 행렬의 가중치는 고유치(eigen value)를 계산하여 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산이 복잡하여 보통 근사방법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주로 사용한다(양기근·이은애, 2010: 67-68).

AHP 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개개인

5) 이원비교 시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며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결과로부터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 또는 이의 역수들로 한다.

의 판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⁶⁾.

일관성 지수(CI) $CI = \frac{\lambda_{\max} - n}{n - 1}$ 로 계산되며, λ_{\max} 는 이원비교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largest eigenvalue)를 의미하며, n은 비교되는 기준의 수를 나타낸다. AHP 이원비교행렬에서는 $\lambda_{\max} \geq n$ 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완벽한 일관성을 지니는 비교행렬의 경우 $\lambda_{\max} = n$ 이며, 일관성이 클수록 λ_{\max} 가 n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비율(CR)을 사용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⁷⁾.

$$CR = \frac{CI}{RI} = \left(\frac{\lambda_{\max} - n}{n - 1} \right) \left(\frac{1}{RI} \right)$$

이에 따른 AHP에서의 판단자료는 계층 내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점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계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할만하고 이용가능한 척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통상 9점 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표본의 구성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도시 공간 내 여성의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측정영역과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측정을 위해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자 및 실무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부 중에서 17부(회수율 85.0%)를 회수하였으며, 전체 설문지에 대한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이 0.1이내로 유의미한 설문지 9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절차(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6) 그 동안 일관성 비율에 대해서는 주로 CR이 0.1이하의 경우에만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이창원 외, 1998; 최길수, 1999; 이창원·차종화, 2000). 그러나 Saaty & Kearns(1985: 34)에서는 CR이 0.2이하의 범위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재은(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화준 등(1996) 역시 일관성 비율이 0.2미만인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해 설정된 가중치 사이에는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류상일, 2007: 123 인용).

7) 무작위 지수(Random Index)는 1부터 9사이의 난수를 사용해서 구성된 비교행렬의 CI들의 평균값으로, 경험적 자료로부터 얻은 행렬의 차원별 평균무작위 지수를 의미한다.

<표> n×n의 이원비교행렬의 무작위 지수

n	1	2	3	4	5	6	7	8	9	10
RI	.00	.00	.58	.90	1.12	1.24	1.32	1.41	1.45	1.49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9)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연령	30-40세	2	22.22
	40-50세	5	55.56
	50세이상	2	22.22
최종학력	학사	3	33.34
	석사	4	44.44
	박사	2	22.22
전공계열	인문사회	8	88.88
	자연공학	1	11.12
직업	교수/연구원	1	11.11
	공무원/의원	5	55.56
	NGO/민간단체	2	22.22
	기타	1	11.11

3. 분석결과

1) 측정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계층 모형에 속한 개별 요인들을 쌍대 비교하여 각 요인별 가중치(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에 안전도시 조성 시 여성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주거환경’ > ‘공공이용시설’ > ‘근린생활공간’의 순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을 다른 세 요소에 비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관성 비율은 0.01로써 설문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공간 내 여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안전정책의 공간의 조성 대상으로 정주 공간인 가정 내, 주택 및 아파트 등의 주거의 시설 등을 포함하는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영역	상대적 중요성	우선순위
공공이용시설	0.323	2
주거환경	0.416	1
근린생활공간	0.261	3

※ CR = 0.01 / N=9

2) 측정요소 및 복합가중치 분석결과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조성 시 여성생활안전 정책의 대상 공간 영역별 각 측정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측정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 공간 내에서 여성의 생활안전 정책 대상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역 내에서 치안활동 강화>안전예방시설강화>주거형태 및 설계>가정 내 예방안전교육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감시시스템이나 외부의 통제가 어려운 공간이 주거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전문가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공간과 달리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 측면에서 외부의 간섭이 어려운 만큼 치안활동과 같은 개입을 통한 안전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예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안전예방시설 강화나 주거형태 및 설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 앞서 고찰한 CPTED에 대한 적용 필요성은 주거환경 내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차순위로 나타난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치안활동강화>안전예방시설강화>시설물설치기준정비>이용편의 및 안전성 정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이용시설에서 역시 물리적 위험요인보다는 타인에 의한 피해, 즉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공이용시설은 공원, 기타 휴양 및 이용시설 등(근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공간 영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초고층 건물 등의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이 활발한 공간으로 보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안전정책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는 것은 안전감시체제로서 CCTV 등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최근 일어나는 각종 범죄가 주거환경으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각종 건물 주차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강력 범죄의 발생이 빈번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근린생활공간으로서 공원, 녹지, 기타 휴양 및 놀이시설에서는 치안활동강화>안전예방시설강화>공간디자인계획 제도 정비> 도시기반시설 안전성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도시정책은 녹지, 공원, 기타 휴양 및 놀이시설 등을 통한 친환경정책에 관심을 두고 도시 조성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린생활공간은 청소년 범죄는 물론 부녀자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좁은 도로 등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치안활동의 강화나 안전예방시설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측정요소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 영역	측정요소	상대적 중요성	측정요소의 우선순위	복합 가중치	전체 측정요소의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공공 이용 시설	이용편의및안전성 정비	0.170	4순위	0.055	10위	0.02
	치안활동강화	0.377	1순위	0.122	2순위	
	안전예방시설강화	0.272	2순위	0.088	5위	
	시설물설치기준정비	0.180	3순위	0.058	9위	
주거 환경	주거형태및설계	0.170	3순위	0.071	6위	0.01
	치안활동강화	0.386	1순위	0.161	1순위	
	안전예방시설강화	0.293	2순위	0.122	2순위	
	가정 내 예방안전교육 프로그램	0.151	4순위	0.063	8위	
근린 생활 공간	도시기반시설안정성	0.145	4순위	0.038	12위	0.01
	치안활동강화	0.391	1순위	0.102	4순위	
	안전예방시설강화	0.273	2순위	0.071	6위	
	공간디자인계획 제도정비	0.191	3순위	0.050	11위	

IV.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발전과제

여성성을 반영한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는 경찰에 의존한 범죄예방활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공간의 정비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의 억제와 치안서비스 공백의 대체를 위한 합리적 수단의 강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물리적 공간으로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 방안과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측면에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 방안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적 접근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주거환경으로부터, 근린생활공간 그리고 그 내부에서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공간 및 공공이용시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되는 공간에서는 크게 안전한 시야의 확보, 범죄예방 설계의 적용, 방법 및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한 시야의 확보는 공원, 녹지 등의 조경물, 휴식공간 등의 휴양 및 놀이시설, 그리고 공공 이용시설로서 초고층 건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있어서 시야 확보를 위해 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연적 가시권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연스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파출소의 배치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미연에 위험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 설계 적용은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로,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 내에는 CCTV 외에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파출소와 직접 연결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법 및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관리사무소, 파출소와 연계되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 인력의 분산 배치와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주거환경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외부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안전예방시설 강화 차원에서 CCTV의 설치 등의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우선적으로 CPED 지침을 적용하여 분리된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을 외부와 경계짓도록 하고 이러한 개인적 공간에 접근하는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가능한 담장의 설치, 아파트 건물 출입구로부터의 외부인 통제 등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의 안전귀가로 설치로 주거와 연결되는 보행공간 주변의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 야간에 적절한 조도의 확보와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각 주동출입구, 여성친화보도 등에 대한 방법시스템의 구축 및 치안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의 안전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도시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외부 공간과 달리 내부 공간으로서 주거환경 내에서의 경찰의 감시 및 감시활동의 어려움에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 대한 감시나 간섭은 피해 발생 이전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 내 폭력이나 범죄 발생의 증가에도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경찰에게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의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통적인 치안이나 안전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적재로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큐리티 산업은 시장지향성이 높으며,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영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면서 수익성이나 시장지향성 보다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 대체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취약계층지원 및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둔 기업들이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일부분에 대한 확대일로와 이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CTV 등 안전 감시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활동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 내에서의 치안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전달 경로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할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를 발견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재 성격을 갖는 안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와 시큐리티 산업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 영역으로부터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기업의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여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가치를 보유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도시설계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도시조성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남성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생활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젠더적 접근과 관심의 증가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AHP 분석을 토대로 도시 공간 내 여성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의 상대적 중요 대상 영역과 정책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공간 내 여성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측정영역에 있어서 '주거환경' > '공공이용시설' > '근린생활공간'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해당 공간에서의 치안활동 강화와 안전예방시설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거환경 내의 감시 시설 및 감시활동의 강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역할로 인식됨에도 사전의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큐리티 산업부문이 시장지향성과 이윤추구 중심의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주 소비자로 인식하면서 상대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CPTED) 지침 적용 과정에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여성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대상영역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밝히고,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하나로서 안전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필요성과 그 진출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 중 일관성 비율(CR: 0.01)이 있는 응답자만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집단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즉 여성 전문가만의 응답 결과만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남성 전문가 집단과의 차별성 내지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갖는다.

둘째, 안전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이나 시장성 등에 대한 구체화된 전략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측정도구 및 지표개발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의 구체화를 시도하는 한편, 안전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경찰청.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 구영욱·김인규. 2010. 현장인터뷰(이경훈 한국셉티드학회장):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도시 만든다-범죄예방과 커뮤니티 복원도 이룰 수 있어. 도시문제. 45(503): 34-39.
- 김경휘·반정호. 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2): 31-64.
- 김동근·윤영진·안건혁. 2007.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2(7): 155-168.
- 김보환. 2003. 시민경찰학교 운영활성화 방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김세용. 2008. 안전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도시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설계. 도시문제. 43(475): 25-37.
- 김신양. 2008.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한국행정연구. 17(3): 207-247.
-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35-60.
- 김영화. 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 대구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정책. 3(1): 91-121.
- 김학실. 2011.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회보. 15(2): 129-154.

- 노화준·노시평·김태일. 1996.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설정. 한국정책학회보. 5(1): 30-54.
- 류상일. 2007.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287-313.
- 박기범. 2008. 시큐리티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109-129.
- 박현호. 2007. 도시범죄대책으로부터 CPTED. 도시정보. 303: 15-20.
- 서진석. 2011.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정보·보안논문지. 11(5): 41-51.
- 신상영. 2012.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기근·이은애. 2010. 재해의연금 배분 효율화 방안: 배분 기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62-71.
- 양문승. 2002.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보. 5: 81-112.
- 오상용·하대용. 2006. AHP 기법을 활용한 기업정보화 투자타당성 분석 사례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3(4): 303-319.
- 윤순진. 2006.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복지·고용의 연결: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과학연구. 10(2): 167-206.
- 이광석. 2007.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27-351.
- 이만형. 2007. 안전한 도시. 도시정보. 303: 2.
- 이상문·전영욱. 2009.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60: 215-231.
- 이영범. 2009.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전망. SAPA News & Platform. 12: 38-40.
- 이은혜·강석진·이경훈. 2008.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2): 129-138.
- 이인재.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 109-140.
- 이재은. 200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정책과 인위재난관리정책 비교 연구: AH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2): 165-185.
- 이주호·변성수·이재은. 2010.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 방향: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6(1): 139-158.
- 이창원·차종화. 2000. 노인복지회관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회관과 일반 노인복지회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215-241.
- 이창원·최창현·권해수. 199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계층분석절차 기법을 이용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한국행정연구. 32(1): 67-85.

- 장석현. 2005.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일 지역경찰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21: 325-362.
- 장석현. 2006.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경찰학논총. 1(1): 79-98.
- 장원봉. 2010.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62: 42-56.
- 조영복·양용희·김혜원. 2008.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적기업연구. 1(2): 61-89.
- 조병인. 2008. 안전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도시의 범죄실태와 안전문제. 도시문제. 43(475): 11-24.
- 조선주·김영옥. 2008.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5(2): 27-60.
- 최길수. 1999.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TQM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8(2): 183-202.
- 최응렬. 199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충북여성발전센터. 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충북여성발전센터.
- 표창원. 200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Premises Liability(장소 소유·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2: 81-1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이슬. 2010. 도로노선선정 과정에서 환경성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환경공학 석사학위논문.
- Ian Colquhoun. 2004. *Design Out Crime: Creating Saf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Elsevier.
- OECD. 1999. *Social Enterprise*. OECD.
- O'Neill, Deirdre. 1998. Effectiveness. Jay M. Shafritz(editor in chief),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2. Boulder, CO: Westview Press.
- Saaty, Thomas L. 1982.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 Saaty, Thomas L. and Kevin P. Kearns. 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http://www.cptedontaro.ca>
- <http://www.who.int>

金學實: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 문화산업정책 집행요인과 성과분석-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책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산업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AHP 분석을 중심으로(2011)”,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2011)” 등이 있다(haksil67@hanmail.net).

李靑浩: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지대추구행태 분석: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현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재무행정, 위기관리, 재난관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2012), “산업복지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연구”(2011, 공저), “Developing the Donation Support System for Disaster Relief”(2011),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단체교섭제도 개선방안 연구”(2011, 공저) 등이 있다(ejuho@chungbuk.ac.kr).

투 고 일: 2012년 05월 10일

수 정 일: 2012년 06월 08일

게재확정일: 2012년 06월 18일

Searching for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Creating Women-friendly Safety City

– Focused on AHP of Safety City Design–

Hak Sil Kim, Ju Ho Lee

The aim of article is the developing policies of safety city design against the women-friendly.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that search for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creating women-friendly safety city. To achieve this, it is that analyzed AHP for women living safety in a city.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iority of factors, which were perceived important by specialists for women living safety in a city.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action and secure facilities at living space was recognized relatively very high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measuring for each city space type were as follows. The importance and priority for women living safety in a city was high in order of living space→public facilities→neighborhood facilit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suggested that considers the city design based on the city space type to create women-friendly safety city. Also, in women-friendly safety city, the social enterprise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role of providing the safety services for women living safety.

Key words: social enterprise, women-friendly, safety city, AHP, police action